



주간 통일정세

2012-1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김정은, 군사과학기술 전람회장 시찰(4/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26차 군사과학기술 전람회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통신은 김 1위원장이 총건평 2만1천여㎡에 개건한 조선인민군 과학기술 전람관의 1~2층 실내전시관과 야외전시관을 둘러보고 인민군대 안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군인들이 이룩한 과학연구사업 성과를 치하했다고 전함.
 -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김명국 총참모부 작전국장, 리재일 당 1부부장 등이 수행함.

- **北 김정은, 부친이 숙청했던 간부 6명 처분 취소(5/2, 마이니치신문)**
 -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단행했던 간부 6명에 대한 숙청을 취소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조선노동당 지도부에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제1비서가 지난 2월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숙청된 인민보안부 간부 등 최소한 6명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전함.
 - 신문에 의하면 김 제1비서는 김 국방위원장 생존 당시 스파이죄로 고발돼 총살형이 확정된 공안기관인 인민보안부 제1부국장에 대해 숙청 이유가 합당치않다며 형을 파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킴.

- **김정은, 노동절 맞아 유리·기계공장 시찰(5/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절(5월1일)을 맞아 평안북도에 있는 대관유리공장과 기계공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대관유리공장을 찾은 김 1위원장은 공장에서 개발한 광학측정기재를 살펴보고 설계실, 자동화실, 전자도서실, 제품건본실 등을 돌아봤으며 기계공장에서 총조립직장과 제관직장 등을 돌아보고 노동자들의 문화오락시설인 '강성원'을 둘러본 뒤 강성원의 봉사자, 강성원을 건설한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음.

- **김정은, 노동절 경축 은하수음악회 관람(5/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인민극장에서 열린 5·1절



경축 은하수음악회 '장군님 식솔'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음악회 1부에서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고 2부에서는 관람자들이 무대로 초청됐으며 김 1위원장의 공연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박도춘, 김기남,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당 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등이 함께함.

● **김정은, 인민군 항공부대 지휘부 시찰(5/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통신은 김 1위원장이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데서 공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항공 및 반항공 무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데 지침이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함.
- 이날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박도춘 당비서, 손철주 군중장, 박재경 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담당 부국장, 리재일 당 선전부 1부부장, 김명국 총참모부 작전국장, 황병서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함.

● **<북한단신> 최룡해, 軍건설현장 또 시찰(5/5, 조선중앙통신)**

-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4일 능라도호안공사 정형을 현지 요해(了解.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북한 권부의 실세로 부상한 최룡해의 건설현장 시찰 공개는 지난달 24일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공사장 현지 요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임.

● **北 김정은, 연내 중국 방문 타진<日經>(5/6, 니혼게이지아이신문)**

-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연내 중국 방문을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이 6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하순 중국을 방문했던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비서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 의향을 전달했다고 전했으며 후주석도 김 제1비서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정치)

- 남포-평양 바닷물수송관 준공식, 4.30 최영림 등 참가下 남포시 와 우도구역에서 진행(4.30,중통)
- 「5.1절」 122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5.1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 개최(5.1,중·평방·중통)
 - 최영림(보고)· 김기남· 양형섭· 강석주· 현상주· 전룡남· 이명길· 로성실· 동정호· 이경식 등 참석
- 김일성 주석 저작(‘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발표 40돌 즈음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10.4선언」 구현을 위한 자주통일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선동(5.3,중통·노동신문/조국통일의 근본초석을 밝힌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2363호’(5.3), 만수대장작사(만수대언덕 김일성· 김정일 동상 건립)에 ‘김정일훈장’ 수여(5.5,중방)
- 최영림(총리), 5.3 단천마그네사공장· 단천제련소 현지 요해(5.4,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5.4 능라도 호안공사 및 평양민속공원 건설장 현지 요해(5.5,중방)
- 「청년동맹」· 「직맹」· 「농근맹」· 「여맹」 대표자회, 5월말~6월초 평양에서 개최 예고(5.5,중방)
- 최영림(내각 총리), 5.4 함흥시 경제사업 현지 요해(5.5,중통·중방)
- 최영림, 5.5 금야강군민발전소와 금야청년탄광사업 현지요해(5.6,중통)

나. 경제

● 北 무연탄 매장량 세계 2위...지하자원 보물고(4/30,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30일 북한의 무연탄 매장량이 150억t으로 추정되며 매장량 면에서 세계 2위라고 보도함.
- 신문은 "종래 제철에서는 코크스가 필수적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코크스 대신 무연탄으로 제철공업을 발전시켜왔다"며 "앞으로 주체철 생산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 인민경제 발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우리나라(북한)는 세계광물의 표본실이라 불리는 지하자원의 보물고"라며 "매장량에서 무연탄 2위, 마그네사이트 3위, 아연 7위, 텅스텐은 9위를 차지한다"며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 망간, 티타늄 등 최첨단기술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자원이 많다는 것"이라고 전함.
- 신문은 또 "(함경남도) 단천지구를 비롯한 각지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54억t"이라며 "단천은 원래 수심이 깊은 항인데 수년간의 항만 공사가 끝나고 머지않아 동해의 또 하나의 근대적인 무역항으로 출발한다"고 소개함.



● 1분기 북-중 교역 사상최대 또 경신(5/1, 미국의소리(VOA))

- 올해 1분기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이 13억6천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1일 보도함.
- 이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의 9억7천2백만 달러보다 40%나 늘어난 것이며 항목별로 보면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이 5억6천8백만 달러로 작년(4억2백만 달러)보다 40% 증가했고, 수입도 전년(5억7천1백만 달러)보다 40% 늘어난 8억 달러에 달하며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가 2억3천2백만 달러로 전년(1억7천만 달러)보다 6천2백만 달러 늘어남.
-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수출품은 석탄으로 작년보다 106%나 증가한 3억1천8백만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했고, 이어 철광석(4천9백만 달러), 비합금 선철(1천5백만 달러), 남성용 합성섬유 재킷(1천2백50만 달러) 등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입품은 원유가 전체의 28%인 1억6천4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t 이상 화물차(3천1백만 달러), 콩기름(1천8백50만 달러), 섬유(1천2백만 달러), 밀가루(1천1백만 달러) 등 순이었음.

● 중국인 북한 관광 속속 재개(5/1,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동차, 철도, 전세기 등을 이용한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노동절(5월1일)을 전후로 속속 재개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중국 하얼빈(哈爾濱)시는 지난달 28일 하얼빈~평양 직항 전세기를 이용한 북한 관광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자체 인터넷을 통해 알리면서 같은 달 27일 전세기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힘.
- 좌석 수가 76석인 고려항공 소속 러시아제 TU134 소형 제트 여객기를 이용한 하얼빈~평양 관광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있으며 10월까지 총 47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관광코스에는 평양과 금강산, 남포, 개성, 묘향산, 판문점 등이 들어있음.
- 중국 신화망(新華網)은 지난달 30일 지린(吉林)성 정부와 여행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올해 첫 나선지역 자동차 관광(2박3일 일정)이 지난달 28일 재개됐다고 전했으며 해당 여행사 관계자는 북한의 공휴일인 5월1일과 2일은 관광일정이 없으며, 북한 세관이 문을 여는 3일 두 번째 자동차 관광이 계획돼 있다고 밝힘.

● 北 5월초 평양서 식량난 해결 '국토대회'(5/2, 좋은벗들)

- 북한 당국이 최근 심각해진 식량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월 초 평양에서 '국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2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53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성, 중앙기관은 물론 각 도·시·군당 일꾼, 국토환경부문 일꾼들에게 평양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해 대회 규모가 지난달 11일 열린 당대표자회에 버금갈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지는 이 대회에서 주로 농경지 부족 해소를 위한 산간지 및 유희지 개간과 식량 증산 방안, 농사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



고 밝힘.

- 중앙당의 한 간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식량생산을 위한 좋은 방법을 근본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대회 개최를 직접 지시했다. 주민들도 이번에는 뭔가 좀 개선되는 것이 아닐까 하며 당 지도부에 조급씩 호감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함.

● 안보리, 北기업 3곳 추가 제재(종합2보)(5/2,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기업 3곳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부터 압록강개발은행 등 은행 1곳과 청송연합(생필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무역회사 2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확정해 기존 제재 리스트에 추가함.
- 이로써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은 8개에서 11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제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북한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됨.

● 中훈춘-北나선 자가용 관광 인기 끌 듯(5/4, 연변일보)

- 4일 연변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올해 첫 자가용관광단 86명이 22대의 차량에 나눠타고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을 출발, 2박 3일간 북한 나선 지역을 관광함.
- 지난해 출시된 이 관광상품은 훈춘시 권하통상구에서 도로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나선에 이르는 코스며, 관광객들은 나선부두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비파도, 망해각, 물개보호구, 빈해어구 등을 둘러보게 보고 김일성 주석 혁명사적지, 꽃온실 참관과 어린이 무용공연 관람 일정도 포함됨.
- 연변일보는 올해 들어 자가용 관광상품의 수속절차가 간소화하고 그동안 관광설명회를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져 본격적인 관광성수기에 접어들면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함.

● 北단천항 준공...지하자원 수출용 항만(5/4, 노동신문)

- 북한은 3일 함경남도 단천에서 최영림 내각총리, 강종관 육해운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천항 준공식을 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전함.
- 북한은 단천항에 1만~3만t급 선박 3척을 동시 정박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을 건설하고 항만과 단천 마그네사이트공장, 단천제련소를 잇는 벨트 컨베이어로 물자를 운송하는 시스템을 갖춰 이 일대의 지하자원을 수출하는 데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신문은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에 즈음해 단천지구에 현대적인 무역항이 일떠섰다"며 "수백만의 화물통과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무역항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나라의 대외무역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함.



다. 군사

● 北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 추진"(5/6, 연합뉴스)

- 북한은 6일 "우리는 자위적인 핵 억제력에 기초해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강성국가를 보란 듯이 건설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일 오스트리아에서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대북 공동성명에 대해 "미국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 세상에서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핵무기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라며 "이것(공동성명)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해 우리의 자주권과 평화적인 우주 및 핵 이용권리를 침해하는 엄중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함.

■ 기타 (대내 군사)

-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5.6)】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공동성명(핵활동 중단과 핵억제력 포기 요구) 전면 배격 및 '자위적 핵억제력에 기초한 평화적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5.6,중통)

라. 사회·문화

● 남포~평양 바닷물 수송관 준공식(4/30, 조선중앙통신)

- '남포~평양 바닷물 수송관' 준공식이 남포시 와우도구역에서 30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수송관 건설이 끝남으로써 바닷물로 먹는 물을 소독해 나라에 많은 이익을 주고 평양공업어관과 중앙동물원 수족관에 바닷물을 원만히 공급해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할수 있게 됐다"고 밝힘.

● 北 올해도 최악 언론 탄압국<프리덤하우스>(5/2,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이 올해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일 전함.
-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일 발표한 2012 국제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 상황이 전 세계 197개국 가운데 최악이라고 밝힘.
- 프리덤하우스는 언론자유가 최악인 나라의 점수를 100점으로 정해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 상황이 양호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음.

● 北, 평양에 새 무궤도전차 운행(5/3, 노동신문)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새로운 형의 무궤도전차를 생



산해 운행한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전함.

- 노동신문은 "수령님(김일성)의 탄생 100돌을 맞은 수도의 거리에는 수많은 새 형의 '천리마'호 무궤도전차들이 달리고 있다"며 "평양 무궤도전차공장에서 생산되는 새 형의 무궤도전차들은 조립되는 족족 시험운행 단계를 거쳐 여객수송에 이용되고 있다. 올해 초에만도 여러 대의 새 무궤도전차가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힘.
- 신문은 "지금 수도의 거의 모든 무궤도전차 노선에서 운행되는 새 형의 '천리마'호 무궤도전차들은 첨단기술에 기초한 자속절환형전동기와 조종체계가 도입된 현대적인 대중 여객 운수수단"이라며 "종전의 무궤도전차에 비해 전력을 40% 이상 절약하는 등 운영원가도 대폭 줄인다"고 소개함.

● 北 신생아 10명 중 1명은 조산아(WHO)(5/4,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신생아 10명 중 1명은 정상적인 임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조산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WHO가 지난 2일 공개한 '세계 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북한에서 태어난 신생아 34만7천6백 명 가운데 임신 37주 이전에 출생한 조산아가 3만7천3백 명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는데 이는 조사 대상 184개국 중 80번째로 높은 수치임.

● 제2회 평양 아마추어골프대회 20일 개최(5/4, 자유아시아방송(RFA))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회 평양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20일 개최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회도 주관하는 영국의 루핀여행사는 현재까지 15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며칠간 추가모집을 한다고 RFA에 전했으며 참가신청을 한 외국인은 뉴질랜드, 독일, 미국, 영국 등 7개국 출신으로 28세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알려짐.

2. 대외정세

가. 일반

● 美, 인공위성 수출규제 완화 추진..北은 제외(4/30,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10여년 만에 인공위성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함.
- 29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공위성 관련 부품을 군용물자리스트(USML)에서



상무부통제리스트(CCL)로 옮기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오바마 "北 '도발-보상' 패턴 끝났다"(종합)(5/1,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제규범과 원칙이 지켜지고, 지역안보를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면서 "북한 도발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도발을 통해 관심을 끌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자신들의 좋은 행동을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식의 오래된 패턴은 무너졌음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고 취임 이후 계속 주장했다"면서 도발과 보상이 반복되는 대북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함.
- 또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외교·정치·경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함.

● **北 최고회의 의장, 이란 핵개발지지(5/1, 교도통신)**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은 30일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 중앙통신을 인용, 최태복이 평양 주재 이란대사가 주최한 연회에 참석해 "이란에 대한 적대세력의 어떤 제재와 군사적 위협도 단호히 배격하고 핵의 평화 이용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란 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함.
- 연회는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로 열렸으며 이란 측도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북한 인민의 투쟁을 계속 지지한다"고 화답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美태평양사령부 "한반도 비상사태 대비"(5/1, 연합뉴스)**

- 미국 태평양군사령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은 추가적인 적대·도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함.
- 특히 사령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미래의 군사작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국의) 동맹으로



서 모든 수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안보리, 대북제재 리스트 제출 시한 연장할 듯(종합)(5/1, 연합뉴스)**
 - 유엔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를 확대하기로 한 의장성명이 채택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 리스트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중국이 리스트를 내지 않았다"면서 "안보리가 중국에 며칠 더 시간을 주기 위해 제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유엔의 다른 관계자도 "북한 제재위원회가 중국이 제출할 북한 기업의 제재 명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2일 자정으로 끝나는 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 리스트 제출 마감 시한을 2~3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힘.

- **中, 유엔 北 추가제재로 3개 단체 자산동결 동의(5/2, 요미우리신문)**
 -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금융기관 등 3개 단체의 추가 자산동결에 동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근거해 북한 관련 금융기관과 무역회사 등 3개 단체를 새로운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하는 추가 제재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고 전함.

- **클린턴, 中에 북핵 해결 협력 촉구(5/3,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3일 제4차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클린턴 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 모두 연설에서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를 외부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함.
 - 그는 "국력과 안보는 추가적인 도발이 아닌 자국민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데서 나온다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는데 중국이 미국과 공동 노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함.

- **北김영남,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방문(5/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함.
 - 또한 통신은 김영남이 싱가포르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핵실험금지조약기구 "對北 24시간 감시 돌입"(5/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연성이 커지자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대북(對北)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일 보도함.
- 토머스 뮌첼부르크 핵실험금지조약기구 부대변인은 "전 세계의 관측 시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하루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2006년과 2009년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을 즉시 감지할 수 있다"고 RFA에 전함.
- 뮌첼부르크 부대변인은 전 세계 321개 관측소와 16개 실험실에서 지진파나 수증음파, 초저주파, 핵물질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핵실험과 관련한 북한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면 1시간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182개 회원국에 전달한다"며 "2009년 북한의 핵실험 때도 1시간30분 만에 모든 회원국에 전달됐다"고 말함.

● 中 "北 핵실험 가능성, 구체적 증거 없다"(5/3,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3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담을 하고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해가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소재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에 이은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음.
- 회담에서 중국 측은 핵실험을 포함해 여러 행태의 추가도발을 하지 않도록 북한을 제어하는데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대남정세

● 北조평통 "선군의 불맛 보여줄 것"(5/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역적배들이 대결과 전쟁이 정소원이라면 우리는 도발자들에게 선군의 불맛을 톡톡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평통 서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겨냥,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명박 역적패당은 우리가 특별행동조치를 선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함.



■ 기타 (대남)

- '이○○역적패당이 특별행동조치 선포와 관련하여 동족대결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군대와 인민을 자극하고 모독하는 고의적 도발, 통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5.2, 평방·민주조선/불속에 날아드는 부나비들의 망동)
- 李大통령의 5월분 월급 전액 '통일항아리' 기부(4.28, 국가재정전략 회의) 등 '통일재원' 기금마련에 대해 '돈으로 저들의 체제통일 망상을 실현하려 한다'고 시비 비난(5.4, 중통·노동신문·평방/수전노의 얼빠진 망상)
- 北 군대와 인민은 '보수언론사가 있는 중구와 종로구, 영등포구를 북수전의 첫 과녁으로 정하고 성전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식 타격으로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5.6, 노동신문/철저히 결산해야 할 보수매문지들의 죄악)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핵실험금지조약기구 "對北 24시간 감시 돌입"(5/1)

-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연성이 커지자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대북(對北)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일 보도했음. 토머스 뮌첼부르크 핵실험금지조약기구 부대변인은 "전 세계의 관측 시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하루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2006년과 2009년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을 즉시 감지할 수 있다"고 RFA에 전했다.
- 뮌첼부르크 부대변인은 전 세계 321개 관측소와 16개 실험실에서 지진 파나 수증음파, 초저주파, 핵물질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핵실험과 관련한 북한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면 1시간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182개 회원국에 전달한다"며 "2009년 북한의 핵실험 때도 1시간30분 만에 모든 회원국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 핵실험금지조약기구는 유엔이 일체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1996년 만든 핵실험 감시기구로, 북한은 핵실험금지조약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음.

● "北 핵무기 개발비 최소 65억8천만弗 추산"(5/2)

- 북한이 현재까지 핵무기 개발에 쏟아 부은 돈이 68억8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내 핵 전문가가 2일 밝혔음. 익명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80년대 이후 북한이 핵시설 건립과 가동에 들인 비용을 중국 산 옥수수 구매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천940만 톤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는 현재 배급량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약 8년 치 배급량에 해당하며 북한의 연간 식량부족량이 연 40만 톤임을 고려할 때 핵 개발 비용으로 약 50년 치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핵개발 비용은 채광·정련시설, 영변핵단지, 농축시설 등을 포함한 핵시설 건립에 약 20억1천만 달러, 핵기술 연구개발에 3억1천만 달러, 핵시설 가동에 27억2천만 달러, 핵무기 개발에 13억4천만 달러, 핵실험에 2억 달러 가량이 소요됐을 것으로 이 전문가는 추정했음. 그는 "이 비용은 관련 기술과 자원확보가 원활한 경우를 상정한 최소 추정치"라면서 "만일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암시장을 통한 기술 및 자원 확보, 시설 은폐 등으로 인해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최초 핵무기 개발 계획이었



던 '맨해튼 프로젝트'를 위해 20억 달러(현재 화폐가치로 약 344억 달러)를 사용했음. 그러나 맨해튼 프로젝트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복투자, 과다 시설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며, 후발 핵무기 개발국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이 전문가는 덧붙였다.

● "北核 원동력은 양질의 우리늄.. 전문가 3천명"(종합)(5/2)

- 북한 핵능력은 양질의 우리늄 자원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핵 전문가가 2일 밝혔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우리늄 매장량은 약 2천600만이며 가채량은 400만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0년 기준 전세계 우리늄 공급량은 연간 7만1천 수준임.
- 전문가들은 북한의 우리늄 자원량이 북한을 제외한 전세계 우리늄 자원량의 5~6배 규모이며, 순도도 높아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이 전문가는 또 "북한은 핵 관련 전문인력을 3천 명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영변 핵단지 시설과 각 대학의 연구시설, 일반 핵연구소 등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또 연간 약 80t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가진 시설을 자체 설계 건설해 1989년부터 가동중이며, 최소 3차례(2003년, 2005년, 2009년) 이상의 재처리를 통해 40여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전문가는 전했다. 핵무기 1기 제조에 약 6kg의 플루토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6-7기의 플루토늄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임.
- 또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미국의 핵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의 우리늄 농축시설과 1천대 이상의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고농축우리늄(HEU) 핵무기 개발이 진행중임을 과시한 바 있음.
- 북한은 2천대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해 가동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북한 주장이 사실일 경우 연간 40kg의 고농축우리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핵 전문가는 분석했음. 우리늄 핵무기 1기 제조에 약 15~25kg의 HEU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1-2기의 HEU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임.
- 북한이 2009년 이후 플루토늄에서 고농축우리늄으로 전환했다고 가정할 때 지난 2-3년 동안 3~6기의 HEU 핵무기 개발이 가능했을 것으로 이 전문가는 관측했음. 이에 따라 플루토늄 핵무기 6~7기와 HEU 핵무기 3~6기를 더하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10기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이 전문가는 분석했음.
- 그는 "북한의 우리늄 농축 연구개발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농축시설 규모와 기술 수준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늄 농축기술의 군사적 전용 및 제3장소에 원심분리기 가동 별도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북한은 내폭형 기폭장치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1980년



대 후반부터 100여 차례 이상의 고품실험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핵실험장을 건설 운영중이며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고, 조만간 3차 핵실험을 준비중인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음.

● 中 "北 핵실험 가능성, 구체적 증거 없다"(5/3)

-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3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담을 하고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해가기로 했음.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소재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에 이은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음.
- 한중 양국의 이런 의견일치는 북한이 조만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음. 회담에서 중국 측은 핵실험을 포함해 여러 행태의 추가도발을 하지 않도록 북한을 제어하는데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아울러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의 이런 입장은 그동안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추이텐카이(崔天凱)·청귀핑(程國平) 외교부 부부장의 언급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임.
-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당사국들은 물론 중국의 국가안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왔음.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을 겨냥해서는 핵실험 등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아울러 한·미·일 등의 주변국에는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양면적 메시지로 해석됨.
- 중국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북한을 비난하는 유엔 성명에 이례적으로 동참해 관심을 샀음. 중국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오고 있음.
- 임 본부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달 중순 방미에 이어 북핵 외교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됨. 미중 양국의 제4차 전략경제대화(SED) 개최와 맞물려 이뤄진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중국 측은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제사회의 북한 핵실험 '저지 외교'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본부장은 우 특별대표와의 회담 후 이날 오후 귀국했음.

● <北핵실험 '저지외교' 활발..한반도정세 기로>(5/3)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조만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이른바 '저지 외교' 행보도 빨라지고 있음. 일단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적극적임.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양국(G2)은 3~4일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되는 제4차 전략경제대화(SED)에서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추가 행동,



- 특히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과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 북한의 최대 혈맹인 중국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성명에 동참했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의증을 충분히 담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미국의 확고한 입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외교·정치·경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천명한데서 확인됨. 같은 날 미국 태평양군사령부도 한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의 향후 조치와 관련해 "모든 수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음.
 - 한국도 움직임이 긴박함.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3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측과 북한 핵문제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함.
 -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함. 정부당국자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여부에 대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라고 보고 있음. 미사일 발사 실패와 김정은 체제의 강화 등을 위해 북한의 지도부가 '군사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자체 논리'를 택할 경우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임. 대외관계 파탄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분석인 셈임.
 - 실제로 북한은 최근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지난달 23일)는 등 대남도발을 예고하며 연일 대외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군 관련 현지지도를 이어가고 있음.
 - 특히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처음으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HEU의 경우 은닉의 수월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과거 두 차례의 플루토늄 방식의 핵실험에 비해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
 - 현지 외교소식통은 2일 "북한의 최근 행보는 핵무기와 발사체(미사일)의 개발 완료를 통해 이른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한편 협상 판 자체를 대형화시키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면서 "비합리적이지만 대외적으로 공언한 사항은 이행하는 북한의 태도로 볼 때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과거 두 차례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반도 정세가 한동안 위기감 속에 빠진 것을 감안할 때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다시 치열한 대치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미국과 한국의 경우 차기 권력의 향방을 가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있다는 점에서 북핵 파고는 더욱 가파르게 출렁거릴 것으로 보임.

● 美 "北핵실험 징후 소문밖에 없다"(5/4)

-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임박설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



- 냈음.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까지 언론 등에서 들은 소문 외에는 지목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음.
- 토너 부대변인은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정보 시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힐 수 없다"고 전제했음.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거듭 밝혔듯이 북한은 명확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며 "나쁜 행동을 계속하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토너 부대변인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관련, "구체적으로 말할 게 없다"면서도 "우리는 한국의 방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한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밖에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기업 제재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기존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최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심각하고 신중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美, 인공위성 수출규제 완화 추진..北은 제외(4/30)

- 미국 정부가 10여년 만에 인공위성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음. 29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공위성 관련 부품을 군용물자리스트(USML)에서 상무부통제리스트(CCL)로 옮기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의회에 있는 이 권한이 대통령에게 이전되면 수천종의 인공위성 관련 부품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군용물자리스트에서 해제돼 외국으로 수출할 때 따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보고서는 다만 수출규제 완화 대상에 기밀부품이 들어있지 않은 통신위성과 제한된 목적의 원격탐사위성 등으로 제한했으며, 군사·정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성 등은 군용물자리스트에 그대로 유지토록 권고했음.
- 특히 모든 수출 및 재수출을 금지하는 대상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지목했음. 이는 이들 국가의 인공위성 개발이 미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최근 북한이 지구관측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3호'의 발사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 미 의회는 지난 1999년 중국이 개발해 쏘아올린 상업위성에 미국 기술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모든 우주산업 관련 부품과 기술을 군용물자리스트로 이전시키면서 이를 해제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음. 그러나 미국 내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에 의해 오히려 자국 우주



-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면서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하원 외교위 간사인 하워드 버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도널드 만줄로(공화·일리노이) 의원 등은 최근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들도 법안에서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유지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공화당이 인공위성 수출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법안이 조만간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로 일레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성명을 내고 "1990년대 미국의 위성기술이 중국 정권의 손에 넘어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는 적대국가의 능력을 향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음.
 - 반면 미 인공위성산업협회(SIA)와 제조업협회(NAM) 등은 모든 우주산업 부품이 장기간 군용물자리스트에 묶이는 동안 미 업계가 경쟁국들에 비해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오바마 "北 '도발-보상' 패턴 끝났다"(종합)(5/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제규범과 원칙이 지켜지고, 지역안보를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은 강함이 아니라 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면서 "북한 도발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도발을 통해 관심을 끌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자신들의 좋은 행동을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식의 오래된 패턴은 무너졌음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고 취임 이후 계속 주장했다"면서 도발과 보상이 반복되는 대북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외교·정치·경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언급, "이는 예측할 수 없으며, 수개월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음. 그는 그러나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하고 추가 도발행위를 통해서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단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음.
- 노다 총리도 "북한이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여러 국가들의 노력을 훼손했다는 데 오바마 대통령



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음. 그는 특히 "북한은 과거 미사일 발사를 한 뒤 핵실험을 감행했다"면서 "이는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망한 뒤 "국제사회는 모두 북한의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이밖에 "일본과 미국,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중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데 오바마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중국인 북한 관광 속속 재개(5/1)

- 자동차, 철도, 전세기 등을 이용한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노동절(5월1일)을 전후로 속속 재개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음. 중국 하얼빈(哈爾濱)시는 지난달 28일 하얼빈~평양 직항 전세기를 이용한 북한 관광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자체 인터넷을 통해 알리면서 같은 달 27일 전세기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 좌석 수가 76석인 고려항공 소속 러시아제 TU134 소형 제트 여객기를 이용한 하얼빈~평양 관광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있으며 10월까지 총 47편이 운행될 예정임. 관광코스에는 평양과 금강산, 남포, 개성, 묘향산, 관문점 등이 들어있음.
- 지난해 10월 중단된 북한 나선지역 자동차 관광도 재개됐음. 중국 신화망(新華網)은 지난달 30일 지린(吉林)성 정부와 여행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올해 첫 나선지역 자동차 관광(2박3일 일정)이 지난달 28일 재개됐다고 전했다. 해당 여행사 관계자는 북한의 공휴일인 5월1일과 2일은 관광일정이 없으며, 북한 세관이 문을 여는 3일 두 번째 자동차 관광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음.
- 한편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중국 투먼(圖們)에서 출발해 북한 칠보산을 둘러보는 단체 열차관광이 중단 6개월 만인 최근 재개됐다고 전했다.
- 중국인 관광객 55명은 지난달 28일 투먼을 거쳐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역에 도착했음. 이들은 남양역에서 북한 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청진, 경성, 칠보산 등을 둘러보고 2일 중국으로 돌아감.
- 중국인의 북한 열차관광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한 달간 진행되다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중단됐음.

● 1분기 북-중 교역 사상최대 또 경신(5/1)

- 올해 1분기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이 13억6천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1일 보도했음. 이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의 9억7천2백만 달러보다 40%나 늘어난 것임.
- 항목별로 보면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이 5억6천8백만 달러로 작년(4억2



- 백만 달러)보다 40% 증가했고, 수입도 전년(5억7천1백만 달러)보다 40% 늘어난 8억 달러에 달했음. 이로써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가 2억3천2백만 달러로 전년(1억7천만 달러)보다 6천2백만 달러 늘어났음.
-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수출품은 석탄으로 작년보다 106%나 증가한 3억1천8백만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했음. 이어 철광석(4천9백만 달러), 비합금 선철(1천5백만 달러), 남성용 합성 섬유 재킷(1천2백50만 달러) 등 순으로 집계됐음.
 - 수입품은 원유가 전체의 28%인 1억6천4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t 이상 화물차(3천1백만 달러), 콩기름(1천8백50만 달러), 섬유(1천2백만 달러), 밀가루(1천1백만 달러) 등 순이었음.
 - 한편 올해 1분기 한국-중국 교역액은 603억 달러로 북-중 교역액의 44 배를 넘었음.
- "中, 유엔 北 추가제재로 3개 단체 자산동결 동의"(5/2)
-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금융기관 등 3개 단체의 추가 자산동결에 동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근거해 북한 관련 금융기관과 무역회사 등 3개 단체를 새로운 자산동결 대상에 포함하는 추가 제재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금명간 북한 관련 3개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방침은 자산동결 대상의 대폭 확대를 요구해온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제안에 비해 매우 한정적임. 중국이 자산동결에 동의하기로 한 북한 관련 단체는 한·미·일과 유럽연합(EU)이 이미 제안한 단체의 일부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기관인 것으로 보임.
 - 한·미·일과 EU는 조선노동당 산하 조직과 무역회사 등 30개 이상의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요구해왔음. 지난달 16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은 자산동결의 추가 대상을 1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음.
- "中훈춘-北나선 자가용 관광 인기 끌 듯"(5/4)
- 중국인들이 자가용을 타고 북한 나선 지역을 관광하는 상품이 올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됐음. 4일 연변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올해 첫 자가용관광단 86명이 22대의 차량에 나눠타고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을 출발, 2박3일간 북한 나선 지역을 관광했음.
 - 지난해 출시된 이 관광상품은 훈춘시 권하통상구에서 도로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나선에 이르는 코스임. 관광객들은 나선부두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비파도, 망해각, 물개보호구, 빈해어구 등을 둘러보게 됨. 또 김일성 주석 혁명사적지, 꽃온실 참관과 어린이 무용 공연 관람 일정도 포함돼 있음.



- 연변일보는 올해 들어 자가용 관광상품의 수속절차가 간소화하고 그동안 관광설명회를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져 본격적인 관광성수기에 접어들면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음. 신문은 올해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관광상품으로 훈춘~나선 자가용 관광 이외에 연변자치주 투먼(圖門)을 출발해 북한 칠보산을 둘러보는 단체 열차관광과 금강산 호화여객선관광을 꼽았음.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훈춘에서 라진항을 거쳐 만경봉호로 금강산을 둘러보는 해상관광코스를 개통, 3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400여 명의 중국인이 금강산을 다녀왔음.
- 북한은 지난해 4월에는 훈춘을 출발,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둘러보는 3국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北 김정은, 연내 중국 방문 타진" <日經>(5/6)

-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연내 중국 방문을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지이 신문이 6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하순 중국을 방문했던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비서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 의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 신문은 후 주석도 김 제1비서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보도했음. 이는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강경 자세를 보이는 한편으로 국내 경제 개선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올해 출범하는 차기 중국 지도부와 대화채널을 구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음.
- 신문은 또 김 제1비서가 이미 국내에서 일정한 구심력을 장악했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으며, 중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교에 나설 환경이 정비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음.
- 신문에 의하면 김 제1비서의 중국 방문은 올해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내에서는 자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김 제1비서의 조기 방문에 난색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강함.
- 중국 측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김 제1비서가 방문할 경우 ▲핵실험 등 군사 면에서의 강경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 ▲경제개혁에 의한 민생 개선을 중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북한 측에서는 "북중 관계가 깊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독립외교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음. 하지만 한 북중 소식통은 "이미 북한 측으로부터 '당장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내부적으로 중국 측에 전달됐음에 틀림없다"고 말했음.
- 후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예로 들어 경제 개혁으로 국내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음. 차기 중국 지도부 진입이 유력시되는 리위안차오(李源朝) 당 조직부장은 지난 3일 방중했던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전 외무상 등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 건설에 힘을 집중하도록 조언하고 있



다"고 밝혔음.

라. 일·북 관계

● "러시아가 北정권 지원한다는 것은 환상"(5/3)

- 러시아가 북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믿음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노선에 대한 가장 잘못된 환상 가운데 하나라고 크렘린 고위 관계자가 3일(현지시간) 밝혔음. 이 관계자는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4년 통치를 정리하는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흔히 북한을 반미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매달리지만 그러한 상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그것은 헛소리"라고 일축했음.
-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어떠한 핵실험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러시아는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북한의 핵문제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바로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가장 큰 환상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아직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와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며 "하지만 최근의 결정(로켓 발사 결정)은 '좁도둑과 골무'의 결정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음. 국제사회의 줄기찬 만류에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이 국수주의적 결정임을 꼬집은 것임. 그는 "다행히 실패로 끝나고만 로켓 발사는 순화해서 말해 불필요한 것이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는 어떤 형태의 탄도로켓 발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관계자는 북한은 러시아에 아무런 좋은 일도 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정책은 허풍과 위협, 공갈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음. 익명이긴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북한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임. 전문가들은 이 관계자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속내를 솔직히 표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마. 기 타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완성"〈러 통신〉(5/1)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새 제재안을 완성했다고 러시아 인터넷뉴스통신 RBK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새 제재안은 일련의 국가들로의 입국이 금지되는 북한 인사 목록을 크게 확대하고 북한의 해외 계좌들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제재안에는 또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 회사 목록과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되는 상품 목록도 추가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최종 결정은 이달 초에 내려질 것이라고 통신은



소개했음.

-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라 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사는 5명이며 자산이 동결된 북한 회사는 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안보리, 대북제재 리스트 제출시한 연장할 듯(종합)(5/2)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확대와 관련해 북한 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 제출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를 확대하기로 한 의장성명이 채택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 리스트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중국이 리스트를 내지 않았다"면서 "안보리가 중국에 며칠 더 시간을 주기 위해 제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유엔의 다른 관계자도 "북한 제재위원회가 중국이 제출할 북한 기업의 제재 명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2일 자정으로 끝나는 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 리스트 제출 마감 시한을 2~3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안보리는 지난달 16일 기존의 대북 제재 강화와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산하기구인 북한 제재위원회에 개인과 단체, 품목 등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음. 안보리는 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접 조치를 하기로 했음.
- 북한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고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제재 확대는 현재까지 제재 대상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중국이 열쇠를 쥐는 셈임.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찬성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유엔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음.
-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제재 대상 북한 기업 40곳의 명단을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기업의 구체적인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 2곳만을 추가해야 한다는 반응을 우선 보였다고 익명을 요청한 유엔 외교관들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음.
- 미국은 중국 측에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릴 북한 기업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외교관들이 덧붙였다. 유엔의 기존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8개 기업과 개인 5명이 올라 있음.

● "안보리, 北기업 3곳 추가 제재키로"(5/2)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기업 3곳을 추가 제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외교 당국자들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은행 1곳과 무역회사 2곳을 기존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이 경우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기업은 8개에서 11개로 늘어나게 됨.



-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13일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대북제재위에 보름 내에 제재대상 기업을 추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음. 우리 정부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각각 20~40개 기업의 명단을 제출했으나 중국 측이 최소한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제재위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최종적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안보리, 北기업 3곳 추가 제재(종합2보)(5/3)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 기업 3곳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결정했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부터 압록강개발은행 등 은행 1곳과 청송연합(생필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무역회사 2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확정해 기존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음.
- 이로써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은 8개에서 11개로 늘었음. 또 지난달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안보리의 대응조치도 공식적으로 종료됐음.
- 제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북한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됨. 주유엔 한국대표부 측은 "이번에 추가된 단체는 기존 제재 대상 단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과 연계해 불법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제재위는 이와 별도로 기존 원자력·탄도미사일 관련 통제 목록을 최신으로 갱신했음. 또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인식 제고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보강하는 등 구체적인 연간 작업계획도 채택, 제재위의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음.
- 제재위가 이번에 추가한 기업은 우리 정부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요청한 40여 곳에 비해 크게 적은 것임. 이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 때문임. 중국은 당초 2개 기업을 추가하는 데만 찬성하다 미국 등의 압박에 못 이겨 막판에 1곳을 더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와 관련,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다. 이번에 추가된 기업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한 서방 외교관도 "우리 요구에는 못 미쳤지만 도발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데는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대북제재위에 보름 내에 제재대상 기업을 추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음. 제재위는 진통을 거듭하다 미 동부 시간으로 1일 자정까지인 보고 시한을 12시간 연장한 상태에서 합의를 도출했음.
-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메커니즘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며 "특히 한·미·일·EU 등 우방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우선으로 추가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단체들이 선정됨에 따라 대북제재 이행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음.

-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후 각각 결의 1718호(2006년)과 1874호(2009년)를 채택해 조선원자력총국 총 8개의 기관·단체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이번에 추가되는 북한 기업과 갱신되는 목록은 북한제재위 홈페이지(www.un.or1718)에 게재될 예정임.

●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약탈자'에 北김정은 포함(5/4)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3일 발표한 세계 최악의 '언론약탈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4일 전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김 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존 당시부터 언론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음.
- 이 단체의 벤저민 이스마일 아시아담당관은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김 1위원장이 김 위원장 사망 전부터 외부로부터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의 민가를 급습해 DVD 알판 등을 수색하도록 지시했고 자신에 대한 우상화와 선전선동에 북한 언론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1월 북한에 미국 AP통신의 상설지국이 개설됐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언론이 폐쇄된 국가이고 김 1위원장 등장 이후에도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철저한 정보 차단과 언론통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광우병 민관조사단 美아이오와 방문(5/2)

- 한국으로 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파견된 민관 현지조사단이 1일(현지시간) 미 아이오와주(州)를 방문했음.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아이오와 에임스에 도착한 조사단은 2일 오전 농무부 산하 국립수의연구소(NVSL)에서 미측 연구원들과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임.
- 국립수의연구소는 지난달 20일 캘리포니아주(州) 축산농가에서 사육된 젖소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을 최종 확인한 곳임. 조사단은 특히 연구소 내에서 소해면상뇌증 진단 등을 담당하는 병리생물학 연구소(PL)의 전문가들과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을 '비정형'으로 판단한



- 근거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어 같은 날 오후 항공편으로 문제의 광우병 젖소가 사육된 캘리포니아 주를 직접 방문, 사료공장과 도축장 등을 둘러보고 현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관리 실태를 평가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메릴랜드 주(州)에 있는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를 방문, 존 클리포드 수석수의관(CVO) 등 미국 측 검역당국자 및 전문가들과 광우병 진단 방식과 수출 쇠고기의 안전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 클리포드 CVO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아주 드문 사례인 BSE에 대해 한국 대표단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 국민뿐 아니라 미국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주이석 조사단장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우리가 질문한 내용, 그리고 이미 통보해준 내용에 대해 매우 성실하게 답변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오늘 논의된 내용은 보고서로 보고하겠다"고 상세한 언급을 피했음.
-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조사단의 미국 내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귀국 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미 농무부 당국자는 이번 사인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 BSE 등의 위험에 대비해 모든 종류의 위험 물질 제거, 가축 감시 프로그램 등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췄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생긴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공군 1전비, 미군과 야간출격 훈련(5/2)

-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은 9일부터 18일 사이 대규모 한미 연합 야간 훈련을 광주 외곽에서 벌임. '맥스 썬더'로 명명한 이번 야간출격훈련은 실전 상황을 가상하고 한미 편대군을 운용, 연합 공군 작전능력을 배양하고 유사시 적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함.
- 광주공항에 인접한 1전비는 미국 공군과 함께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야간 비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음. 광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야간 전투기 출격 소음 등에 더 민감해질 것으로 우려됨.
- 공군 1전비 관계자는 "야간 비행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심화할 수 있지만 이번 훈련과 같이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없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양해를 당부했음.

나. 한·중 관계

● 韓中,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종합2보)(5/2)

-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음. 한중 양국은 2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회담한 데 이



- 어 기자회견을 열어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박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3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오는 등 7년간 준비 기간을 거쳤고 2010년부터 민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하면서 "협상 개시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언급했음.
 - 그는 이어 "협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협상이 시작되면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별로 협상 지침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허 문제 등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시킬 예정이며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그리고 민감 품목을 초민감과 민감 품목으로 나눠 양허 제외와 관세 장기 감축 등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아울러 "한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음. 이는 한중 양국이 개성공단 등 사실상 북한 내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주목됨.
 - 또 "한중 FTA 상의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앞으로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기업인들에게 폭넓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임은 물론 한반도 경제협력과 평화 정착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음. 한국이 여타 국가와 FTA 협상 개시 전에 상대국과 한반도 내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음.
 - 천 상무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한 회담은 오늘 정식 시작했고 5월에 첫 FTA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그는 한중 FTA 체결 전망에 대해 "개인적으로 2년 내에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내놨음. 그러나 한중 양국이 FTA 체결 종결시점에 관한 논의는 없었으며 우리 정부는 종결 시점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천 상무부장은 한중 FTA와 한중일 FTA의 관계에 대해 "대립이 아닌 보완 관계"라며 "3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체이고 서로 중요한 무역파트너로 3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세계 전체 GDP의 20%에 달한다"고 전했음. 그는 특히 "조만간 한중일 정상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며 3국의 지도자들이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한중 양국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우선 FTA 협상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음. 1단계에서는 양국의 민감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와 FTA 범위 설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한국 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 측은 자동차, 기계, 석유 분야 등의 제조업을 민감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한국 측은 한중 FTA 체결로 값싼 중국산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정부 관계자는 "1단계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음. 이 관계자는 "1단계 협상에서 한중 양국이 원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2단계 협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조기에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한국은 그동안 산관학 공동연구와 공청회 등 중국과의 FTA 협



상을 위한 사전 국내 절차를 종료했음.

● <“한중관계, 대북·대미 인식차 해소가 관건”>(5/2)

- 관훈클럽(총무 김민배)은 2일 시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관계의 내일을 묻는다'란 주제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열었음. 이날 토론회에는 추수룡(楚樹龍) 칭화대(淸華大) 교수와 주평(朱鋒) 베이징대(北京大) 교수를 비롯해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김홍규 성신여대 교수 등이 참석해 북한 문제 등 동북아시아 정세를 논했음.
-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차 = 북한 정권에 대해서 주 교수는 김정은이 효율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고 실질적 권력은 군장성과 북한에 핵개발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봤음. 그는 김정은 체제가 권력승계과정에서의 내부투쟁 등으로 20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점쳤음.
- 반면 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승계는 현재 무난하며 단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추정했음. 그도 중장기적으로 변수가 많고 북한 내부의 돌발사태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음.
- 지난 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주 교수는 북한 지배엘리트가 서방측과 합의를 이룰 준비가 돼있지 않고 낡은 체제를 지키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음. 주 교수는 북한의 최근 남한 공격 위협도 변화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며 북한 내부를 고려해 내놓은 결정이라고 말했음.
- 김 교수는 북한 핵위기의 근본원인이 북한이 직면한 대외적 위협 외에도 정권의 무능과 불안감,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봤음.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김 교수는 중국이 북한 편향적 이어서 한국의 대중국 불신이 강화됐다고 지적했음.
- 반면 추 교수는 한국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지만 중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대신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이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지만 한국인들이 무시했다는 것임.
- ◇동북아 지역 행위자로서 미국 = 주 교수는 중국이 부상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한반도가 당분간 동북아 정치의 중심축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음. 다만, 주 교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우위가 확실한 만큼 예측 가능한 미래에 중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에 도전할 입장은 아니라고 분석했음. 그는 또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헤게모니 장악에 익숙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미국 주도의 협력적 안보 노력에 동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 한편 추 교수는 한국 지도층이 친미적이며, 한국이 한미 양자동맹을 지역적, 글로벌 역할로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음. 추 교수는 양자적 역할을 넘어선 한미동맹은 대중 봉쇄와 제약을 위한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 정 사장은 말리카 해협을 거치는 서태평양 자유항로에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되면 중국은 이를 대중 포위망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한중관계의 미래 = 추 교수는 한중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 가진 입장차 때문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실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 역시 현 정권이 미국 일변도 정책을 택함에 따라 양국간 정치적 신뢰도가 크게 제감했다고 봤음.
- 김 교수는 중국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북한과의 '북 노동당-중 공산당 전략대화'를 통해 양측에 영향력 확대하며 안정 위주의 한반도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음.
- 김 교수는 미일 간, 미중 간 세력전이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연미연중(聯美聯中)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정 이사장은 중국에게 한국을 미국의 대중 포위전진기지로 보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양국 간 군사 외교 경제적 교집합을 늘려갈 것을 주문했음.

다. 미·중 관계

● 대만, 美에 신형전투기 판매요청서 전달 검토(5/2)

- 대만이 미-중, 중-대만 마찰의 불씨가 돼온 최신형 F-16 전투기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음. 대만 국방부는 2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미국 측에 F-16 C/D 전투기 판매요청서를 공식 전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국방부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 국가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미국 백악관 로버트 내보즈 입법담당 국장은 지난달 27일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만이 점차 더 큰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전투기 판매는 진지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루퍼트 해몬드-체임버스 미·대만상회 회장은 이와 관련,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대만과 중국의 공군력 격차를 인정한 것이며 그 해결책으로 신형 전투기 판매를 시사한 것이어서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고 대만 언론이 전했다.
- 현지 언론은 3~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전투기 판매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음. 미국은 지난해 9월 대만과 F-16 A/B 전투기 성능개량 지원 계약을 체결했음.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F-16 C/D 전투기 판매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음.

● 클린턴, 中에 북핵 해결 협력 촉구(5/3)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3일 제4차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 모두 연설에서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를 외부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력과 안보는 추가적인 도발



- 이 아닌 자국민의 필요를 우선시하는데서 나온다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는데 중국이 미국과 공동 노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음.
- 그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에 이어 조만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청으로 해석됨.
 - 미국은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국이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이를 비난하는 유엔 성명에 동참하기도 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고 있음.
 - 이날 미중 전략경제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틀간 계속됨.

● 〈美中 전략경제대화의 산적한 난제〉(5/3)

- 미국과 중국이 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에서 제4차 전략경제대화(SEED)를 개시한 가운데 산적한 난제를 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 북한 핵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동북아 질서 재편 등의 안보 현안은 물론 위안화 절상, 지적재산권, 보호무역주의 공방 등이 단골 이슈처럼 올라있음.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이를 만회하려는 제3차 핵실험 강행 여부에 국제사회의 촉각이 모아지면서 이와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천광청(陳光誠) 변호사의 중국 내 미국 대사관 진입에 따른 인권 다툼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 ◆ 천광청 美 망명 요청에 미중 '설전' 예상 = 공교롭게 전략경제대화 개최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신망을 받는 시각장애 인권변호사가 한 편의 영화처럼 가택연금 상태에서 빠져나와 베이징(北京) 소재 미 대사관에 뛰어들면서 핫이슈로 부상했음. 천광청은 옛새간 미 대사관에 머물기는 했으나 줄곧 미국 망명이 아닌 중국에 머물면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해 미중 양국이 접점을 찾는 듯했음. 그러나 상황은 2일 급반전됐음.
- 미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베이징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가족과 만난 천광청이 미국 망명을 요청했기 때문임. 천광청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했음. 본인과 가족의 신변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미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음.
- 이런 탓에 '대응'을 나름대로 자제해왔던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천광



- 청의 미 대사관 진입으로 며칠간 소란은 있었지만 미국행을 좌절시킬 수 있기를 바랐던 중국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임.
- 중국은 올 들어 왕리쥘(王立軍) 망명기도 사건으로 차기 상무위원으로 유력시되던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서기를 '숙청'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치적인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천광청의 미국 망명이 중국 내 혼란을 가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무엇보다 차후 10년간의 권력 교체를 이룰 제18차 당대회를 앞두고 혼란이 조성되는데 바짝 긴장하고 있음.
 - 천광청이 미국에 망명하게 되면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인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 안팎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임.
 - 이 때문에 중국 외교부는 2일 미국을 직접 겨냥해 비난을 쏟아냈음.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을 통해 미 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국민인 천광청을 미 대사관으로 데려갔다고 비난했음.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도 경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음.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도 보였음.
 -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도 그냥 물러설 수 없는 처지로 보임. 인권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면 약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클린턴 장관은 전략경제대화 참석에 앞서 성명을 내고 "천광청 변호사가 안전한 장소에서 고등교육을 더 받는 것을 포함해 (그의) 미래에 관해 중국 정부와 몇 가지 합의를 했다"며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다음 과제"라고 밝혔음. 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천광청의 미국행을 배제하지 않은 뉘앙스임.
 - 따라서 이번 제4차 전략경제대화는 천광청의 미국 망명 여부를 놓고 '강대 강'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임.
 - ◆ 미중, 北 3차 핵실험 저지 논의 = 북한이 지난달 여러 의도를 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참담하게 실패하면서 이를 만회하려는 차원에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핵심 당사국인 미중 역시 이를 논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큰 탓임.
 - 미국은 여러 차례 경고음을 날렸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의 미일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음. 같은 날 미국 태평양군사령부도 "모든 수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이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음.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저지 외교'에 나선 모습임.
 - 중국의 향후 태도가 관심을 끄는 건 이 때문임.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북한을 비난하는 유엔 성명에 '동참'했으나 대북 제재에는 여전히 미지근한 입장임.
 -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과거 두 차례 했



던 플루토늄 방식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을 하는 것임.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제4차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에 북한 핵실험 저지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도마 위에 오를 듯 = 중국은 미국에 남중국해 분쟁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고 이번에도 이를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임. 중국은 근래 필리핀이 사실상 미국의 '지원'을 받고 남중국해상의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분쟁에 나서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특히 필리핀이 미국에 초계정과 초계기, 레이더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음.
- 사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에 맞춰 군사력을 빠르게 팽창시키면서 미중 간에 불거지는 불가피한 '대치'라는 분석도 있음. 미국은 지난 1일 워싱턴에서 필리핀과의 국방·외교장관이 참석한 '2+2' 안보회담을 열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의무와 공약을 재확인하고 해상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해가겠다고 약속하는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남중국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불개입'한다는 제스처를 유지하는 모습임.
- 이밖에 이란 핵문제와 시리아 사태, 남수단·수단 분쟁 등의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 ◆ 미중, 경제현안 설전도 예상 = 위안화 절상 공방도 빠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이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하루 1%로 확대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미국으로선 만족하지 않기 때문임.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임.
-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나름대로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미국은 만연된 '짜퉁' 상품 근절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미국이 무분별하게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첨단기술 제품 수출제한을 해제해야 미중 무역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임.

● 미중 전략대화 개막...인권·경제 '격론'(종합2보)(5/3)

- 미국과 중국 간 제4차 전략경제대화가 3일 베이징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했음. 이날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 등 20여개 부문의 양국 책임자들이 참석했음.
- 이번 회의는 중국 시각 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사태의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천광청 사태로 북한 핵 문제나 교역 등 주요 의제가 묻히는 것을 피하고자 서둘러 해법을 내놓았으나 미국 대사관을 나온 천광청이 위협을 받았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구명을 호소하는 등 사태가 오히려 증폭되고 있음.



- 이날 개막식 발언에서도 양국은 천광청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인권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관영 중국중앙(CC)TV로 중계된 개막식 축사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 나라의 사정이 달라 모든 의견이 일치할 수 없다"며 "쌍방은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공통 이익의 케이크를 최대한 키워야 한다"고 밝혔음.
- 후 주석은 이어 "중국과 미국은 상호 이익과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현존하는 문제들을 타당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큰 틀에 악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후 주석은 또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세계에 거대한 손해를 끼친다"며 "국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중국 국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쌍방은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모든 정부가 '우리 시민들의 존엄에 대한 열망과 법에 의한 통치에 답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어떤 나라도 이런 권리를 부정할 수도,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음.
- 미국은 이번 대화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면서 천광청을 가족과 함께 중국의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켜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은 아울러 장애인 여성 인권변호사 니위란(倪玉蘭), 민주주의 운동가인 주위푸(朱虞夫), 수감 중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 등 다른 중국 인권운동가들의 자유 보장을 거론하는 등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이전부터 미국의 이런 인권공세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반박해왔으며 이번에도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됨.
- 양국은 전략경제대화의 틀 속에서 2일 베이징에서 미국의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장즈진(張志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안보대화를 개최, 주요 전략 현안과 함께 종합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음.
- 인권문제 외에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는 북한 핵문제, 이란 핵프로그램, 시리아 사태 등 주요 안보 현안과 함께 위안화 문제, 첨단기술 수출 문제를 포함한 통상문제, 반덤핑 등 각종 무역조치,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등의 경제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양측은 첫날부터 해묵은 갈등 소재인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음. 가이트너 장관은 최근 2년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13% 절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아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강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위안화가 중국의 개혁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달러 등 주요 화폐에 대한 위안화 평가 시스템의 개혁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밝혔음.
- 그러나 가이트너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왕 부총리는 "중국과 미국은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내부의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음. 이 표현은 중국 인사들이 위안화 환율 문제 등 외부 변수로 미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사고방식을 에둘러 비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임.



- 하지만 천광청 사건을 제외하고는 최근 미·중 관계는 비교적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에 따라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안보나 경제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은 북한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반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찬성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으며 위안화 변동폭을 하루 1%로 확대하는 등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도 했음. 또 최근 중국이 수입확대 조치를 통해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양국간 무역마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미국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제한을 비롯한 각종 무역조치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방도 날카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가운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비롯한 관영 언론 매체들은 중미 전략경제대화의 긍정적 의의를 강조하는 기사를 대거 실었음. 인민일보는 사실 격인 '중성(鐘聲)' 칼럼에서 "사람들은 이번 대화를 매우 중요시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다"며 "중국은 줄곧 미국과 더불어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부단히 대화,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위기 속 협상력 보인 미중전략대화>(5/4)

- 천광청(陳光誠) 사태로 시작부터 커다란 암초를 만났던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4일 천 변호사의 유학이라는 극적 합의점을 도출해내면서 순조롭게 마무리됐음. 천광청 사태의 타결을 통해 미중 양국은 대화를 바탕으로 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것은 물론 전략경제대화 본연의 목표인 전략적 소통 강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아울러 천광청 사태에 묻혀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이란 핵, 시리아·수단 문제 등 국제 현안에서 위안화 환율 형성 시스템을 비롯한 경제·통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양측은 대립각 형성을 최대한 자제했다는 점도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특징으로 손꼽힘.
- ◇'명분'과 '실리' 주고받은 천광청 해법 = 4차 전략경제대화 첫날인 3일 천 변호사가 고국에 남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미국행을 갑작스럽게 호소할 때만 해도 이번 전략경제대화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는 듯했음. 치외법권 지역인 미국 대사관 문밖을 나선 천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중국이 '인권 탄압국'임을 자인하는 모양새를 받아들이면서 천 변호사를 미국으로 보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었음.
- 이런 난관 속에도 미·중은 대화장 안팎의 공식·물밑 대화를 통해 '유학 허용'이라는 신속한 절충안을 도출해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천광청이 미국으로 떠나더라도 중국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최대한 삼가는 조건을 요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줄기차게 주창해온 '보편적 인권 수호'라는 대의를 저버리지



- 않았다는 명분을 얻었음.
- 중국도 무자비한 인권 탄압국이라는 비난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고 천광청의 향후 행동을 상당 부분 제약할 수 있게 됐음. 아울러 중국은 향후 10년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뇌부 교체를 앞두고 무엇보다 필요한 미중 관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실리도 얻게 됐음.
 - 천광청 사태의 조기 수습을 통해 사실상의 G2로 부상한 미국과 중국은 향후 다른 위기와 갈등 국면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목임.
 - ◇북한 핵 문제 '최대 공약수' 공감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에 이어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대두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우선 순위 의제로 부상했음. 그간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중국은 '더 큰 도발'을 막으려고 '작은 도발'을 묵인 또는 용인하는 듯한 태도로 양국에 대립각이 형성됐다면 이번 대화에서는 '3차 핵실험 반대'라는 큰 틀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음.
 - 중국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동참했고 비록 대상 쪽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안보리 차원의 북한 기업 추가 제재에도 동의하면서 북한 압박에 가세했음. 이 밖에도 중국은 최근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추이텐카이(崔天凱)·청국핑(程國平) 외교부 부부장의 언급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음.
 - 미국은 이번 전략경제 대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여러 차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음.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4일 전략경제대화 폐막 발언을 통해 북한과 이란 핵문제, 시리아와 수단 사태를 '당면한 가장 시급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을 가장 먼저 언급했음.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그동안 해온 역할을 인정하며, 안보와 힘은 도발이 아니라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북한이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혈맹' 관계에 있는 북한의 처지를 고려한 듯 중국은 전략경제대화 기간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음. 그러나 북한 문제에서 미중 양국이 3차 핵실험 저지라는 '최대 공약수'를 확인한 것은 향후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에 긍정적인 기대를 낳고 있음.
 - ◇차이 재확인한 경제 현안 = 위안화 환율, 첨단기술 상품 금수 해제, 반덤핑, 지적재산권 보호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양국이 해묵은 갈등 구조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대화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평가됨. 다만 양국 대표단은 감정적인 대립각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의견 차이를 좁혀 온 지금까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협력 가능성을 남겨두는 등 분위기가 역력했음.
 - 최대 경제 현안인 위안화 환율 형성 시스템 개혁 문제와 관련해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첫날 기조연설을 통해 "더 강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위안화가 중국의 개혁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음.



그러나 가이트너 장관은 4일 전략경제대화를 마무리하고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중국이 시장 지향적인 환율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 조짐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일부 긴장 속에서도 개선돼왔다"며 톤을 한층 낮췄음.

● 中, 천광청 美유학 허용...갈등 해소 국면(종합2보)(5/4)

- 중국 정부가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의 유학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류 대변인은 "천광청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천광청이 원한다면 일반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른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유학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성명에서 천광청 유학 허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음. 그의 이런 언급은 천광청이 갈망하는 미국 망명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 류 대변인은 이어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천광청의 전과 전력이 여권 발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이미 석방이 된 사람으로 중국법에 따라 정상적 경로를 통해 수속을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 대변인은 유학 허용에 전제 조건이 있는지, 수속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다른 가족들이 동행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더 이상 제공할 소식이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음.
- 아울러 류 대변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천광청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미국이 중국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이 미국 측의 유감 표명을 실질적인 사과로 받아들이고 갈등 국면을 봉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음.
- 천광청의 유학을 허용하는 중국 정부 결정은 이날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이틀째 회의가 진행되는 외중에 나왔음. 이로써 천광청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베이징 차오양(朝陽) 병원에서 미국행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야기됐던 미중 간 외교 갈등은 해소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됨.
- 천광청은 지난달 27일 베이징(北京)의 주중 미 대사관으로 진입한 지 엿새만인 지난 2일 차오양 병원으로 가기를 희망해 그곳에서 아내를 포함한 가족을 만나고서 미국행을 강력하게 요청했음. 특히 천광청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3일 청문회가 열리던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 전화를 걸어 "미국으로 가서 쉬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음. 천광청의 당시 육성이 생중계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사기도 했음.
- 중국은 천광청이 미국에 가게 되면 텐안문(天安門) 사태 이후 미국으로 망명했던 반체제 천체물리학자 팡리즈(方勵之)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활동을 할 것을 우려해왔음. 중국 정부가 천광청의 미국 유학을 허락한 배경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음.



나 이번 사태로 인한 미중 관계 훼손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라. 미·일 관계

● 美日, 中 견제 GPS 공동 개발(4/30)

-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내달 1일(일본시각)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GPS의 공동개발을 공동성명에 넣기로 했음.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GPS 구축을 견제하고, 미국과 일본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음.
- 미국은 약 30기의 GPS 위성을 전세계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무료로 정보를 받아 내비게이션 등에 이용하고 있음. 일본 정부도 2010년 9월 GPS 위성 1기를 쏘아 올려 자체 GPS 구축을 추진해왔음.
- 하지만, 양국은 독자 개발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GPS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음. 미국 GPS의 위치 정보는 약 10m의 오차가 있지만, 일본 GPS는 2m 이내의 오차를 자랑함. 정확도가 높을수록 재난 시의 피난이나 교통기관의 운행관리 시스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일본은 GPS 사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임.
-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움직임도 의식하고 있음. 중국은 위성 10기를 발사해 중국판 GPS 개발에 착수했음. 작년 말부터 시험운용에 들어갔으며, 올해 위성 6기를 추가 발사해 아시아태평양 전역을 커버한다는 계획임.
- GPS 정보의 제공국이 시스템 보수점검 등을 이유로 운용을 정지할 경우 이용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일본은 중국판 GPS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석권할 경우 역내 국가들이 중요 인프라를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일본 독자적으로 GPS를 구축하기보다 미국과 공동으로 이를 개발해 아시아 각국의 신뢰를 얻겠다는 전략임.

● 오바마, 日에 車·쇠고기·보험 양보 요구(5/1)

-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의 협상 조건으로 자동차와 쇠고기, 보험 분야의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음.
- 1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노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TPPA 협상 참여와 관련 "미국으로서는 자동차와 보험, 쇠고기 등 3개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음. 그는 "특히 자동차산업과 관련해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TPPA 협상에 참여하려면 미국이 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와 보험, 쇠고기 분야에서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임.
-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TPPA 협상 참여 문제와 관련, 이처럼 구체적



요구를 한 것은 처음임.

- 미국의 산업계는 자동차의 경우 비관세 장벽 철폐를, 보험 분야에서는 사실상의 국유회사인 우편 계열의 '간포생명보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과 보증 문제 해소를, 쇠고기 부문에서는 현행 20개월 이하로 한정 한 수입 쇠고기의 월령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 노다 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정력적으로 논의를 계속해 왔다"면서 "(TPPA) 사전 협의를 진전시키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애초 이번 정상회담에서 TPPA 협상 참여를 선언 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반발을 의식해 유보했음.

● <美日 정상회담서 후텐마 이전 논의 '실종'>(5/1)

-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시급한 안보 현안인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에 대한 논의가 빠졌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일본 총리는 30일(미국 시각) 워싱턴에서 공식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음.
- 하지만, 양국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안보 현안인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 문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음. 오바마 대통령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아예 꺼내지 않았고, 노다 총리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토대로 조기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을 뿐임. 이는 양국 정상이 만날 때마다 후텐마 이전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다루며 신경전을 펴왔던 것과 비교됨.
- 교도통신에 의하면 작년 9월 정상회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텐마 이전에 대해 "결과를 요구할 시점"이라며 진전을 요구했고, 노다 총리는 오키나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음.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도 노다 총리는 후텐마를 미국과 합의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연내 제출'을 공언했고, 이에 따라 작년 말 노다 총리가 오키나와를 직접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
-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언급이 없었음. 이는 두 정상이 진전이 없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후텐마의 이전이 오키나와의 반발로 물 건너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음. 이미 양국은 최근 마무리된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의 수정 협상에서 후텐마 이전 문제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재편을 분리했음.
- 교도통신은 "양국 정상이 후텐마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 것은 이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해석했음. 이는 현행 후텐마 기지의 '고정화'를 의미함.
- 일각에서는 후텐마 기지를 같은 오키나와 내 가테나(嘉手納)기지과 합칠 것을 요구하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칼 레빈 위원장을 의식해 후텐마 문제를 논의에서 제외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의 관심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없었음. 노다 총리가 국내 반발을 의식



해 이에 대한 본격 논의를 피했기 때문임.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와 보험, 쇠고기 분야에서 관심이 있다"고 업계의 요구를 들고나와 일본에 양보를 요구했지만, 노다 총리는 "일본 국내에서 정력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TPPA의) 사전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애초 노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TPPA 협상 참여를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포기했음.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소비세인상 법안 처리 문제가 민주당 내 반발과 야권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TPPA 협상 참여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피한 것임. 미국이 TPPA 협상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일본에 요구하는 자동차와 보험, 쇠고기 분야의 양보를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마. 미·러 관계

● <미군, 나흘 동안 러시아 영공 정찰 비행>(5/2)

- 미군과 터키군이 2일(현지시간)부터 나흘 동안 러시아 영공에서 정찰 비행을 실시한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을 인용해 보도했음.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열린 하늘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2일부터 5일까지 미국과 터키 검열단이 CN-235 정찰 수송기를 타고 러시아 영공을 정찰 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국방부는 "러시아 전문가들이 항공기에 함께 타 정찰 장비 이용에 관한 합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992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27개 회원국이 체결한 '열린 하늘에 관한 국제조약'은 조약 당사국들의 군비 및 군대 배치 상황 등을 상호 점검할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 협약임. 현재 조약 참가국은 34개국이며 러시아는 2001년 가입했음.

바. 중·일 관계

● 日 희토류 脫중국 총력전...인도서도 수입(5/1)

- 일본이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음.
- 1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인도의 뉴델리를 방문 중인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은 인도 정부와 희토류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음. 이에 따라 일본의 도요타통상은 인도 원자력청의 자회사인 인디언레이어스와 우라늄을 추출한 흙에서 희토류를 생산하는 공장을 6월 중에 완공하고 8월부터 생산을 개시하기로 했음. 인도의 희토류 생산이 본격화하면 연간 일본 소비량의 14%인 약 4천t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에서 생산될 희토류는 하이브리드차의 모터 전극에 쓰이는 네오듐, 자동차 엔진 배기가스의 촉매로 사용되는 세륨 등임. 인도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5위인 110만t이지만 연간 생산량은 2천700t에 그치고 있음.
- 일본은 카자흐스탄과도 희토류인 '디스프로슘'의 공동 개발에 합의할 예



- 정입.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함. 일본의 스미토모상사와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공사가 희토류의 공동개발에 참여할 계획임.
- 일본은 현재 연간 500t의 디스프로슘을 사용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이의 10% 이상을 조달한다는 계획임. 디스프로슘은 하이브리드 차량용 모터 등에 쓰이는 고성능 자석 제조 등에 활용됨.
 - 일본은 이미 베트남에 희토류 가공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음. 일본의 소재기업인 신에츠화학은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 연산 1천t 규모의 희토류 공장을 건설해 내년 2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음.
 - 일본이 희토류 수입선 다변화에 총력을 쏟는 것은 중국에 편중된 수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임. 일본은 지금까지 희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했지만 재작년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충돌 이후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면서 위기감을 느껴왔음.

● "대만-日 조세협정 체결 검토"(5/3)

- 대만과 일본이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조세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사(CNA)가 타이베이를 방문 중인 일본 개혁신당 마스조에 요이치(舩添要一)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3일 보도했음.
- 마스조에 대표는 조세협정 추진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일본 기업이 이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협정이 맺어지면 무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일본 기업이 대만 진출에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대만과 일본은 지난해 9월 상호 투자 확대와 교류 증진을 위한 투자협정을 맺었음. 이에 따라 양국은 시장 진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상대방 투자 기업을 자국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대우하는 '내국민 대우'를 상호 제공하고 있음.

● 中해양순시선, 댜오위다오 근해 재접근(5/3)

- 일본 도쿄도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매입을 추진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어정선(漁政船·해양 순시선)이 댜오위다오 근해에 접근했음. 3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 산하 동해어정국은 소속 선박 두 척이 댜오위다오 근해에서 '정상적인 순찰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음. 지난달 29일 모항을 떠난 '어정 203호'와 '어정 204호'는 이달 9일까지 댜오위다오 근해에 머무를 계획임.
-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수시로 순시선을 댜오위다오 근해에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기해왔음. 대부분은 댜오위다오 근해까지 최대한 접근했다가 물러났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영해(해변에서 12해리)'에 진입한 사례도 있음.
- 중국은 올해 댜오위다오에 4차례 어정선을 접근시켰고 그때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대치하는 사태가 반복됐음. 다만 중국 어정선들은 일본 순시선이 접근해 물러나라고 요구하면 "다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다. 우리는 정상적 순찰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잠시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물러나는 방식으로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명분 쌓기'에 주력해왔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어정선을 다시 투입한 것이 일본의 우익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가 다오위다오를 사들이겠다는 '도발'을 한 데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유엔이 남태평양의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섬으로 인정하면서 중국이 반대하는 일본의 대륙붕 확장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다는 지적임.

사. 중·러 관계

● "日-러 북방영토 공동경제협력사업 검토 중"(5/3)

-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서 양국 공동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민주당 정조회장이 3일 밝혔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마에하라 회장은 이날 현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공동경제활동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양국의 법률적 입장에 아무런 해(害)도 끼치지 않을 것이란 공통의 인식이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 문제가 전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거론됐다고 소개하고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 협정은 없지만 공동경제활동 가능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세계 제2차 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양국의 입장이 줄곧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부에선 법적 영유권 문제는 일단 미뤄두고 상호 실리적 차원에서 두 나라가 쿠릴열도에서 공동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해왔음.

● "러 대통령, 日에 쿠릴열도 절대 양보 않을 것"(5/3)

- 러시아의 어느 대통령도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가운데 단 하나의 섬이라도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크렘린 고위 관계자가 3일(현지시간)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4년 통치를 정리하는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러시아 대통령도 절대



그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본이 쿠릴열도를 넘겨받을) 어떤 역사적 기회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6년 러시아의 시베리아 도시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린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일본 총리 간 회담에서 일본은 쿠릴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 크라스노야르스크 회담 뒤 일부 언론은 러시아가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2개 섬에 대해 행정적 지배권은 유지하면서 실질적 사용권을 일본에 양보하는 비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한 바 있음. 크렘린 고위 관계자의 이날 발언은 당시 그러한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만일 일본이 이를 수용했으면 쿠릴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임.
- 크렘린 관계자는 이어 2010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섬들이 확실히 러시아 영토라는 점을 일본 정부에 인식시키는 "치료적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음.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세계 제2차 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아. 기 타

● 美태평양사령부 "한반도 비상사태 대비"(5/1)

- 미국 태평양군사령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은 추가적인 적대·도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 특히 사령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미래의 군사작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국의) 동맹으로서 모든 수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군사령관이 지난 17일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도할 경우 "모든 범주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임.
- 이어 사령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언급, "한국은 자위권을 갖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측의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의무를 계속 무시한다면 추가적인 고립과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밖에 사령부는 북한이 최근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한 미사일이 가짜라는 일각의 주장과 핵실험 임박설 등에 대해서는 "정보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음.

● "美, 亞전략 조정.. 필리핀 역할 확대" <NYT>(5/1)

- 필리핀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음.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 도서 부근 해역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음. 남중국해에 접한 필리핀 서부 팔라완 해안에서 무장세력이 장악한 섬을 탈환하는 상륙작전도 포함됐음. 미국은 이 합동 군사훈련이 매년 시행된 연례행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임.
-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병력을 대폭 증강하는데 대해 필리핀을 비롯한 영유권 분쟁국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를 액면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분석했음.
- 미국은 아시아 주둔군의 규모를 확대하는 새 국방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는 최근 몇 주 사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지난 26일 일본 오키나와(沖縄) 주둔 미 해병 1만9천명 가운데 9천명을 괌과 하와이, 호주 등으로 분산하되 나머지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주둔시키기로 합의했음. 두 나라는 중국을 겨냥, 미군과 자위대가 경계감시 활동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동적방위(動的防衛)협력'에도 합의할 예정임.
- 이와 별도로 미국은 이날 워싱턴에서 필리핀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회담을 연. 최근 몇 달간 필리핀 주둔 미군의 확대 방안을 논의해 온 양국은 국방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임.
- 필리핀이 자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은 대미 정책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함. 과거 수십 년간 미국의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반미정서가 강함. 지난 1992년 수빅만 해군기지에서 시작해 수년 전까지 미군 기지를 잇달아 폐쇄한 것은 식민시절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이었음.
- 물론 지금도 반미감정은 남아 있음. 양국 합동 군사훈련이 열릴 때에도 수백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음. 그러나 중국이 이 지역에서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면서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필리핀 국민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바뀌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임.
- 최근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중임. 자력으로 중국에 맞설 힘이 없는 필리핀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 이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과 맞아떨어지면서 양국 관계를 코라손 아키노 정권 이후 최고의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음.
- 국방전문지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제임스 하디 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디터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노골적인 야욕을 보이면서 필리핀



의 친미 행보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CRS)도 이번 달 보고서에서 외교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로 옮기는데 있어 필리핀과의 관계는 핵심 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중상하이서 제4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5/2)**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광식 장관이 오는 4-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예술·문화재·문화산업 분야에서 3국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아시아 문화공동체를 구현할 방안을 논의하게 됨. 회의는 4일 저녁 중국 문화부 주최 환영 만찬으로 시작됨. 이어 5일에는 3국 장관 공식회의와 문화 협력 액션플랜(2012-2014) 채택 및 공동 기자 회견 등이 예정돼 있음.
- 최 장관은 중국 차이우 문화부 부장, 일본 히라노 히로후미 문부과학 대신과 각각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간 문화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최 장관은 3국 장관회의 기조연설에서 향후 3년 동안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시행할 액션플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힐 예정임. 액션플랜에 포함된 한·중·일 문화교류 공동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문화예술 도시, 한·중·일 예술제, 문화예술교육포럼 등임.
- 최 장관은 이어 오는 12일부터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참가국의 날(6월 2일 일본의 날, 6월 28일 중국의 날) 행사에 대한 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임.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3국의 문화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로 2007년 중국 난통시, 2008년 한국 제주도, 2011년 일본 나라 현에서 개최된 바 있음.

● **대만, 中에 대만인 수감자 현황공개 요구(5/3)**

- 대만 정치권이 중국 당국에 교도소나 수용소에 갇힌 대만인 현황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음. 대만 집권 국민당과 제1 야당인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가 인권 단체의 교도소 접근과 감시 활동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이 3일 전했다.
- 정치권은 성명에서 "중국 내에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대만인이 중국에 억류돼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중국이 대만인을 조사, 재판하고 감금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방문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권은 또 다음 달로 예정된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간 제8차 양안 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日, 미국 내 '위안부 추모비' 철거 외교 노골화(5/3)

- 일본 정부가 미국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의 철거를 위한 외교적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음. 미국은 물론 서방권 전역에서 유일하게 위안부 추모비가 설치돼 있는 뉴저지 주의 한인 밀집지역인 펠리세이즈파크에서임. 하지만 펠리세이즈파크 시당국은 일본의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음.
- 2일(현지시간) 미국 한인들의 권리신장 운동을 펼치는 한인유권자센터(KAVC)와 펠리세이즈파크시 등에 따르면 히로키 시게유키 주미 뉴욕 총영사와 나가세 켄수케 정무담당 부총영사가 전날 시청을 방문, 도서관 앞에 건립돼 있는 '위안부 기림비'가 양국 관계증진 프로그램에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면 '철거(remove)'를 요구했음. 일본 측은 기림비를 없애는 대가로 벚꽃길 조성을 위한 벚꽃나무 지원과 도서관장서 기증, 미일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신설,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거액의 투자 등을 약속했음.
- 일본 자민당 의원 4명도 조만간 시청을 방문해 기림비의 철거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음. 기림비를 제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본격화된 셈임.
- 그러나 제임스 로튼도 펠리세이즈파크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기림비는 전쟁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에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반복될 철거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또 전쟁범죄 등 잘못된 과거는 재발하지 않도록 드러내고 교육해야 한다는 게 내 정치철학"이라며 "특히 추모비는 여성과 인권에 관한 문제로 정치나 외교에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 추모비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계인 이종철 펠리세이즈파크 시의원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시와 협의하기 전에 한국 정부 및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전날 시청을 방문한 일본 외교관들은 시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다 뒤늦게 기림비 철거 문제를 끄집어냈고, 이에 로튼도 시장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음.
- 펠리세이즈파크의 기림비는 미 연방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3년여 만인 지난 2010년 10월23일 한인유권자센터를 주축으로 진행된 미국 동포들의 풀뿌리 시민운동 결과로 세워졌음. 유권자센터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펠리세이즈파크시와 버겐카운티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 추모비를 설치할 부지와 석재를 기증받았음. 건립비용 1만 달러는 교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됐음.
- 서구권 최초로 세워진 이 기림비는 당시 미국은 물론 일본과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됐음. 가로, 세로 약 1미터 크기의 대리석 기림비에는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정부 군대에 유린당한 20여



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기린다"며 "'위안부'로 알려진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했으며, 우리는 인류에 대한 이 잔혹한 범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음.

- 한편, 일본 정부는 유권자센터가 위안부 결의안 통과 5주년을 맞는 7월 31일까지 뉴욕 플러싱 등 미국의 3개 지역에 추가로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뉴욕시에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고 유권자센터가 밝혔다. 유권자센터는 플러싱의 한인 타운에서는 미국 최초로 위안부를 추모하는 도로인 가칭 '위안부 기림길'을 만들기 위해 시당국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음.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5일 상하이서 열려(5/4)

- 제4회 한중일(韓中日) 문화장관회의가 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림. 최광식(崔光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이우(蔡武) 중국 문화부 부장,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일본 문부과학상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3국간 문화협력 확대를 위한 '문화협력 액션플랜(2012~2014)'이 집중 논의됨.
- 액션플랜은 동아시아 문화예술도시, 한중일 예술제, 문화행사 정례화, 문화유산 보호, 문화산업 교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담고 있음. 3국 장관은 공식 회의 후 확정된 액션플랜에 대해 공동 서명할 예정이라고 문화부가 4일 전했다.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07년 9월 중국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한국, 2011년 1월 일본 등에서 번갈아 개최됐음.

● "中, 경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美 관리〉(5/4)

- 중국은 3일 베이징에서 시작된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경제 개혁 논의에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4일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음. 이 관리는 중국이 자국 소비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반면 국유기업의 역할은 축소하는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런 몸짓은 앞으로 수출과 국가 주도 투자에 의존해온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더 내수에 치중하는 쪽으로 '경제 균형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중국이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라고 저널은 분석했음.
- 저널은 이번 대화가 보시라이(薄熙來) 전 서기와 천광청(陳光誠) 인권 변호사 사태에 뒤이어 열린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동에서 충분한 진전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관리는 이들 사건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외국인분 제한 완화와 중국 국유기업의 배당 확대, 국유기업에 대한 수출 보조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에 수입되는 소비자 상품에 대한 관세와 중국 내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첫날 대화 모두 발언에서 중국에 경



제 개혁 박차를 주문했음. 그는 "중국이 수출보다는 내수 소비에 더 의존해야 하며 국유기업보다는 민간기업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관리는 블룸버그에 "중국이 수출 금융에서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선화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중국이 수출 금융 개선에서 완전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저널은 가이트너가 중국 측에 그간의 위안화 절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 저널은 그러나 미 측의 위안화 절상 압박 근거가 이전보다 미약하다면 한 예로 중국의 경상 흑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에 그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관측한 점을 지적했음. 이와 관련, 저널은 가이트너가 지난 2010년 중국의 경상 흑자가 GDP의 4%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점을 상기시켰음.

● "오바마 새 안보정책 핵심은 '절묘한 균형'"〈NYT〉(5/4)

- 한쪽에서는 미국의 '공적 1호'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것을 자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인들이 지켜워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철군을 서두르겠다고 재확인함. 올 연말 대선을 앞둔 벅박 오바마 미 대통령 얘기임. 선거일이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그는 국가안보 분야에서 매피와 비둘기파 양쪽의 이미지를 모두 보여주면서 아슬아슬한 '양다리 전략'을 구사함. 재선에 성공했을 때 미국의 새로운 안보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짐작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과거 40년간 민주당은 안보 문제에서 기존의 온건한 이미지를 고수했고 이는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음.
- 하지만 유권자들이 전쟁에는 지켜워하면서도 강력한 미국을 원하는 이중적인 성향을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오바마는 1990년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경제와 내정 문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가안보 분야에서 극단을 오가며 자신의 포지션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음.
- 오바마의 이런 스탠스는 지난 1일의 아프간 깜짝 방문에서 단적으로 드러났음. 전임자인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때로는 오히려 더욱 강하게 나간다고 비판하는 민주당 일각의 비판론자는 물론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적국에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해온 공화당 측 인사들도 이번 방문에 혀를 찼다는 반응을 보였음.
- 오바마의 이런 행보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면 최근의 여론조사를 볼 때 충분히 먹혀들고 있다는 게 타임스의 평가임. 핵심 측근들도 오바마가 역대 어떤 민주당 대선 후보들보다 국가안보 문제에서 강공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벤자민 로데스 미 국가안보자문위원은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에 전적으로 찬성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비판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했던 '포스트 9.11'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오바마는 두개의 전쟁을 끝내면서도 적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의 이런 태도가 신념이 아닌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는 것임. 상원 군사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의 존 코닌(텍사스) 의원은 "오바마는 이도 저도 아닌 묘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는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코닌 의원은 무인기 전쟁 전략으로 비용은 줄이면서 안보는 강화하겠다는 오바마의 정책에 대해 "그는 (테러범에 대한) 가혹한 심문 기법을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공습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며 "그런 태도는 너무 깊이가 없고 정략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국가안보 정책에서 강경과 온건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가는 것이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음.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CBS 방송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9%는 미군 통수권자로서 오바마의 역량을 신뢰한다고 대답.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56%보다 오히려 높았음. 안보문제 만큼은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취약하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뒤집힌 셈임.

● 러, 서방에 "미사일 방어망 공동 이용" 제안(5/4)

- 러시아와 미국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러시아가 운용 중인 공중우주방어(요격 미사일 및 레이더) 시스템을 제3국에서 기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공동의 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이 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토노프 차관은 이날 미사일방어(MD)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한 외국 전문가들이 모스크바 근교 '소프리노' 방공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와 서방이 합의하면 이곳에 배치돼 있는 레이더 시스템 'Don-2N(나토명 Pill Box)'을 잠재적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아직 해당 시설의 공동 이용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실질적 협력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토노프는 러시아가 MD 분야에서 국제 협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날 외국 대표단을 소프리노 기지로 초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가 이란과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구축하고 있는 유럽 MD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러시아와 나토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 MD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해 왔음. 러시아와 나토가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전역을 구역으로 나눠, 맡은 구역에 대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는 책임을 지게 하자는 구상임. 동시에



MD 관련 정보도 상호 공유할 것을 제안했음.

- 하지만 나토는 러시아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음.

● **대만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 계획 없다"(5/4)**

- 대만 당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음. 대만 국방부 자오스장(趙世璋) 부부장은 3일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미사일 배치는 인접한 국가와의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해당 지역에서의 정기적인 순찰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4일 전했다. 자오 부부장은 "지금은 현재의 무기체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 대만은 남중국해 동사군도(東沙群島 · 프리타스)에 '새퍼렐(Chaparral)' 미사일을 배치해 왔으나 지리적으로 보수 및 유지 활동이 어려운 점을 들어 2001년 이를 철수했음. 대만은 앞서 1999년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해병대를 철수시킨 이후 해안경비대 병력을 파견해 난사군도(南沙群島 · 스프래틀리) 타이핑다오(太平島)와 동사군도의 수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대만 여야 정치권은 최근 국방부 장비 구매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이들 지역에 새퍼렐, '텐젠(天劍) 1' 방공미사일 등을 배치하라고 요구하는 등 영토주권 강화를 주문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